

KAASM

**2017 KAASM Conference
Panel Discussion**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Sport
Industry: Major Issues and Suggestions"**
“한국스포츠산업의 미래: 당면과제와 제안”

June 1, 2017, 5:00PM

Denver Grand Hyatt Hotel (Room TBD)

Panelists:

- Joon-Ho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ung Hak Lee (Kyung Hee University)
- Sungho Cho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Kangsan Kim (KSPO, Former Chairman of Labor Union)
- Moderator: Dae Hee Kwak (University of Michigan)



Dr. Joon-Ho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Jeoung Hak Lee
Kyung Hee University



Dr. Sungho Cho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Mr. Kangsan Kim, KSPO
Former Chairman of
Labor Union

패널 참가자 및 약력

강준호 교수 (Ph.D., University of Michigan)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전 서울대 기획부처장
-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소장
- Dream Together Master's Program 단장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문위원 겸 전문가 그룹위원

이정학 교수 (Ph.D. University of Minnesota)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및 부학장
-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책임연구원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사무총장/부회장
-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장

조성호 교수 (Ph.D., University of Connecticut)

- 볼링그린주립대학교 부교수
- 미국 변호사 (J.D.)

김강산 위원장 (MBA 수료,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채 1 기
-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조위원장
- 문체부 산하 12 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주제요약

1. 새정부, 엘리트-생활체육 통합 시대에서 스포츠산업이 당면한 과제

- a. 1.1. 2015 년 스포츠개발원에서 발간한 스포츠산업백서에 의하면 한국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43 조원이고, 관광산업의 약 1.6 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규모의 7.5%, 일본의 1/3 수준입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는 29 만명에 이르고, 사업체 수도 76,000 개가 넘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징후 중장기계획을 2013 년 12 월에 수립했습니다. 크게 (1) 융복합 스포츠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2) 스포츠콘텐츠 다변화를 통한 잠재수요 발굴, (3) 미래 시장 수요 기반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 (4) 스포츠산업 선순환 기반조성 이라는 4 대 미래 정책 방향을 세웠는데요, 2016 년 8 월 부터는 스포츠산업 촉진을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 월 9 일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연설한 체육관련 정책 핵심 기조는 '공정한 스포츠'와 '학교체육 개혁을 통한 스포츠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엘리트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정부의 체육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2. 프로스포츠 산업

- a. 프로구단들의 재정적 자립이 요원합니다. 프로야구는 매출 규모가 전세계 세번째이지만, 프로축구는 관중이 계속 하락세에 있으며, 시장 규모에 비해 프로스포츠 종목이 많고, 모기업 의존적인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요청 사항이었던 구단의 시설 장기임대가 진흥법 개정안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삼성은 스포츠단 운영을 제일기획으로 이관했습니다. 구단 운영 패러다임 변화가 시도되고, 자생을 위한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로 스포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해보입니다. 산업과 학계 입장에서, 그리고 마케팅, 전략, 및 법 등 해당 전문 분야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향후 5 년 이내에 프로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3. 스포츠강국 속의 그림자

- a. 나름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해온 과정 뒤에는 그림자도 그만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선수 인권, 학습권, (성)폭력, 파벌주의, 승부조작 등 한국스포츠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암초들이 여전합니다. 스포츠산업도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스포츠산업에서도 나타납니다. 정책의 방향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타파해야 할 **한국 스포츠산업의 후진적 현상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4. 스포츠경영 전문인력 양성의 허와 실

- a. 2016 년 한국 스포츠 산업 관련 업종 종사자가 29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 스포츠개발원 및 매년 5 개 대학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스포츠 산업 및 경영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포츠 관련 학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이고 가장 빠르게 전국적으로 성장한 전공입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스포츠산업에 대한 몸집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학생들은 전문적인 스포츠 마케터, 행정가, 저널리스트 등을 꿈꾸며 입학했는데, 스포츠관련학과에서 관련 일을 찾기에 는 괴리가 있다는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협회,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관련 회사들도 정작 일반학과 내지는 경영학과 출신을 선호합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수도권 몇몇 대학들에 국한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계에서 또는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주세요.

5. 더 나은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고언

- a. 융복합, 데이터사이언스, 4 차산업혁명 등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용어들 가운데 스포츠는 여전히 강력한 콘텐츠 소스 및 플랫폼으로써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루고, 사회통합, 건강과 행복 증진을 이루고, 동시에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기 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론자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1 분씩 부탁드립니다.

주제별 발제내용 요약

1. 새 정부, 엘리트-생활체육 통합 시대에서 스포츠산업이 당면한 과제

[이정학]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연평균 4.4%의 지속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41조 원의 스포츠산업 매출액, 27만 스포츠종사자를 기점으로 2018년 53조 원의 스포츠산업 매출액과 33만 스포츠산업 종사자를 목표로 국내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을 위해 2016년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하위법령은 대부분 스포츠산업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정비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그 골자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중 스포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모태펀드(스포츠계정)에 출자하고 조합이나 회사에 스포츠펀드의 출자가 가능하게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신설)를 개정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등(신설)을 개정하여 취/창업 및 스포츠산업운영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경영, 법률, 회계, 디자인, 특허 등)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두드러진 성과로 판단된다. 개선점으로는 새 정부의 엘리트-생활체육 통합 시대에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선수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 제도(한국형에이전트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시책마련이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세부시책 신설 및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김강산]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 1) 스포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투자 등의 실체적 근거가 마련되고
- 2) 스포츠용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마련 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스포츠산업 육성 관련 “법 개정”으로 예산이 추가 확보되고 전담조직이 가동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이와 관련 저희 공단에서는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전담부서에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창원지원, “스포츠 산업지원센터”가동되고 있고 스포츠용품인증, 자금융자, 스포츠산업일자리 센터, 창업지원, 신시장 개척지원, 스포츠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Job Fair) 있는데 더 확대되고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준호]

문체부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산업육성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2-3 번의 중장기 계획 수립,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문체부 체육국 산하 스포츠산업과 신설 등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0년 국무총리실은 문체부의 스포츠산업육성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정부의 노력은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새로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프로구단의 경기장 장기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프로스포츠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이상 추진해온 스포츠산업 정책은 성과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첫째, 스포츠용품산업을 스포츠산업의 핵심정책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이는 스포츠산업을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고 인식하고 일본의 산업성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산업을 공급자관점으로 분류한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기반으로 함으로써 통계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포츠산업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스포츠산업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상품들이 스포츠라는 하위문화에 기반해 파생되어 복합시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급자관점보다는 시장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시장은 크게 본원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시장은 스포츠의 최종 소비자가 스포츠를 소비하는 두 형태에 따라 관람스포츠시장과 참여스포츠시장으로 나누어지고, 파생시장은 본원시장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향후, 정부의 스포츠산업정책은 정책대상인 스포츠산업의 구조와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시장의 핵심인 관람스포츠시장과 참여스포츠시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람시장과 참여시장의 기반이 되는 선수육성시스템, 시설, 재정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1.2. 새정부 스포츠 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한 평가

[김강산]

먼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은 체육계 농단이며 체육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태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나 학사관리”또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같은 폐단이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런선 상에서 “문제인 새 정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와 체육학교 관리가 강조되는 정책이나 공약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 새 정부 큰 비전은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슬로건 아래 7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새 정부의 큰 방향은 보다 모든 국민들에게는 스포츠를 좀 더 쉽게 가까이 즐기고 체육특기자 들에게 보다 공부와 체육을 병행하고 입시전형과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에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특히 스포츠 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사항 과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 ▶ 첫번째로 새정부의 역점은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늘리기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스포츠 산업 육성 확대, 창업지원센터 확대,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으로, 특히 저희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공단은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5 년 기준 428 억의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이미 “스포츠 산업지원센터”가동되고 있고 스포츠용품인증, 자금융자, 스포츠산업일자리 센터, 창업지원, 신시장 개척지원, 스포츠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job Fair) 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부지원으로 더 확대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5 년에 서울과 대구에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에 6,774 매칭해서 성공률 443 명 6.5% 미비한 성과임, 이는 청년들이 공단,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 창원지원사업도 “벤처기업의 부작용을 보았듯이 마구잡이 실적위주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 ★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퇴선수에 대한 사회적응분야인데 “미국 UF 처럼 은퇴선수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두번째로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으로 최저학력 이수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정서상 운동선수나 부모님들의 자체적으로 의식이 부족한 단계여서,
 - ★ 도입단계서부터 철저한 사전교육과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로 시작해서 시행후에는 엄격한 관리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미 정착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모범적인 선진사례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세번째로 그 밖에도 “체육인 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에는 예산확보 우선 되어야하고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생활체육시설과 공공기관 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을 확대” 계획은 현재 학교내 다목적체육관 뿐만아니라
 - ★ 지역주민센터 내 체육시설 상시 개방확대가 필요하며
 - ★ “체육단체 자율성보장”은 업무범위 와 권한을 명확하게 선 긋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문화부 12 개 산하기관 협의체 의장을 경험해봤지만, 문화부 산하기관들은 일방적인 문화부 지시나 압력에 의해지시에 따라야 하는 형편인데, 예를들면 공단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로비로 투명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선정권”이나 “ 학교운동장 우레탄 잔디 선정권한이” 다시 공단에게 되돌려 산하기관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라는 지구촌 축제가 열립니다. 2002 월드컵에서 보았듯이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남북한의 화합되고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 스포츠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2. 프로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강준호]

프로스포츠시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연맹과 구단의 거버넌스이다. 한국 프로스포츠는 1980년대 초 정부의 압력으로 대기업이 프로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기업은 프로스포츠구단을 스포츠산업의 공급자 보다는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우승만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합리화 보다는 성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구단의 운영비는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모든 구단이 50-75%의 적자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 프로스포츠는 모기업중심의 거버넌스를 연맹중심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경영체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강산]

프로스포츠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6개종목 "축구,농구, 야구,배구,골프, 씨름"경기주체단체에 매출액대비 수익금을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연맹, 한국여자프로골프연맹, 한국씨름연맹 등에 4,500억원 정도 지원을 했으나 그나마 2015년도부터 배분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프로활성화에 기여를 못하는 여건입니다. 프로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단된 지원금을 다시 살려 프로야구 이외에는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구단의 장기임대를 위한 조례개정과 구장의 광고,매점,주차장 운영권등 지자체와 구단간의 공생과 협력관계가 긴밀한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2016년 프로야구 : 800만 관중을 돌파, 10개 구단이 운영되는 등 외적팽창
- 삼성 라이온즈 : 2016년 706억 매출, 39억 영업이익을 기록
- 넥센 히어로즈 : 2016년 626억 매출, 202억 영업이익

[이정학]

지역연고제를 중심으로 편성된 국내 프로스포츠의 향후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구단의 상생관계를 위해 수익공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체는 프로스포츠 구단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여 구단의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적자운영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구단의 연고지 구장의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사업 가능성을 위한 구단의 시설투자 기반 조성을 통해 연고지 구단의 지역경제 기여의 공생 관계 마련이 향후 프로스포츠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3. 스포츠 강국 속의 그림자 - 선수 인권, 폭력, 파벌주의, 승부조작

[강준호]

한국스포츠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압축성장했다. 국가주도로 소수엘리트선수에 집중투자한 결과다. 마치 정부가 소수 대기업을 집중지원해 이뤄낸 '한강의 기적'과 같다. 그 결과 스포츠강국이라는 위상을 얻었지만 성적(결과)지상주의로 인한 폐해가 나타났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운동선수, 구타, 성희롱, 승부조작, 도핑, 부태 등이 그것이다. 향후, 한국스포츠는 스포츠강국보다 스포츠선진국을 지향해야 한다. 스포츠선진국은 스포츠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온국민이 누리게 하는 것이다. 스포츠선진국은 국가보다는 개인을,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김강산]

승부조작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지난번 승부조작으로 2011년 프로축구 40명 영구제명, 2012 축구와 배구, 2013년 프로농구, 2015 프로농구, 프로 야구 경기에서 많은 배당금을 노리고 선수와 폭력조직의 연합으로 선수들의 경기 승부조작이 있었는데요,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 다양한 경기를 발매하면서 배팅조합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승부조작에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승부조작이나 불법도박 근절대책으로 저희 공단에서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센터나 전문심리상담제도, 신고자 포상제도, 사전예방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수개인의 윤리의식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교육차원에서라도 “선수들의 윤리교육 의무 학점제도” 강화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학]

한국 스포츠 산업의 후진적 현상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수익의 개념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그 원인이라 판단된다. 스포츠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투자가 요구 된다. 일회성 또는 단발적 정책, 제도, 지원을 토대로 한 산업은 지속성과 전통성(명문/일류)을 가질 수 없으며 한국을 대표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제품 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다.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나 스포츠제품의 탄생은 꾸준한 투자의 결실이라는 사실이다.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허와 실

[김강산]

사회자가 말씀하시다시피 스포츠관련 학과에서 취업하기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 체육단체 중 가장 큰 조직인 공단에서 공개채용 신입사원들을 12-13 명씩은 뽑는데 그나마 정책적으로 채용할당제로 체육관련학과 출신 최소 3-4 명씩은 25%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단 특성상 스포츠행정이나 보니 경영,경제, 회계, 법 전공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 체육정책 기조가 “스포츠산업 확대 및 일자리 늘리기”만큼 공단의 스포츠산업 관련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또는 스포츠 산업 채용박람회 (job fair) 확대가 예상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등으로 스포츠산업 관련학생들의 취업의 기회가 넓어질 것 예상합니다.

☞ 스포츠산업 관련 대학교내에서도 체육단체나 스포츠분야 회사들과 자매결연으로 “맞춤형 실습교육 강좌나 스포츠산업 현장체험 탐방”등을 개설하여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정보, 자격증 취득 등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해 취업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든지, 체육과 학생들도 복수전공으로 경영, 경제, 행정들을 공부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인재육성단에서는 체육인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7 년 6 월부터 체육학과 졸업자 및 체육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통역량, 전문역량(체육행정, 심판, 지도자, 스포츠정보분석가, 글로벌 스포츠인재), 글로벌 전문역량 과정을 최초로 개설합니다. 금번 오픈되는 과정은 교육과정 수강생에 대한 요구조사, 스포츠관련

잡마켓 시장의 요구역량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체육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공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비롯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입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정학]

그 동안 체육학(스포츠)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스포츠관련 산업 또는 경영학 학문의 영역을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스포츠산업의 확장과 도전이 될 것이며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풍요로운 한국 스포츠산업을 위한 변화에 편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준호]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스포츠산업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질적으로 차별화된 인재란 스포츠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시에 스포츠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원천지식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업계는 학생들이 현장의 핵심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독창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단순 경험지식을 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향하는 산학협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계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현장의 핵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지식을 창출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한다.

5. 더 나은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고언

[강준호]

스포츠제도 및 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스포츠를 단순한 소비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자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비산업영역과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타 산업영역과 상호발전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균형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강산]

오늘의 주제가 "스포츠산업의 미래"인데요 향후 대한민국의 스포츠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갈수록 건강과 여가스포츠에 대한 높은 수준과 다양한 니즈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스포츠산업분야에도 국민 눈높이 한발 앞서 더 전문성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요구되어 일자리는 더욱 늘어 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스마트한 시대에 고도기술과 스포츠가 결합된 4차 산업혁명으로 편리성, 정확성, 접근성 등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새로운 분야들이 스포츠산업의 시장경제가 성장기로 가는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스포츠로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패널로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정학]

변화의 패러다임을 읽어야 발전할 수 있다. 신기술과 기존산업, 학문간의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융합기술산업의 미래시대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변화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로봇이 축구경기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며 다차원 각도에서 공정한 경기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대행할 수도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새로운 융복합산업의 출현에 대해 거부감이 아닌 미래 산업의 확장과 가능성에 대한 기회로 스포츠산업의 방향성(cyber-physical-system,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플랫폼 등)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및 공익/내부 제보자의 법적 보호

조성호 (볼링그린 주립대학 교수/미국 변호사)

개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체육관련 정책 핵심 기조는 '공정한 스포츠'와 '학교체육 개혁을 통한 스포츠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엘리트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이 과거의 엘리트 지상주의를 넘어서고, 스포츠를 통한 혜택이 사회전반에 걸쳐 온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압축된 논점을 제시합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선수의 교육권; (2) 공익/내부 제보자의 법적 보호.

헌법상 교육권리와 제보자의 법적 보호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리

미국 연방헌법에는 교육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몇몇 주 헌법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코네티컷 주 헌법). 민주주의의 발상지 중 하나라는 영국은 아예 성문화된 헌법이 없고 교육이 기본권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 1 항-6 항은 다음과 같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헌법이 교육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교육이 국가 운영의 필수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 입니다.

학교 체육의 개혁은 그동안 엘리트 선수 중심의 체계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은 근래에 들어 학계와 교육일선에서 많은 논쟁 및 고찰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이 보편적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그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주제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제도의 효율성만 고려해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은 보장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볼때 미성년자인 학생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기회를 구조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도의 효율성을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인적자원의 투자와 배분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결정 됩니다. 인적자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공히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개인들만이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노동시장에서 비로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상층부 이하의 구성원들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본다면 그들은 다른 피라미드로 순조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으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심 학교체육은 노동시장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박탈은 피라미드 최상층부에 도달하지 못한 대다수 선수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기술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 공익/내부 제보자의 법적보호

정부주도 하에 공적자원이 투입되는 모든 정책들은 엄격한 감시기능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산업이나 체육 관련 정책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스포츠의 특성상 공익/내부 제보자의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공익/내부 제보자의 법적인 보호가 중요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익 제보자의 보호 및 포상에 나서고 있지만 (예: 공익 신고자 보호법) 기업행위에 관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맹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직업적인 공익 제보자의 등장 등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회전반에 걸친 득과 실을 비교할때 반드시 유지하고 더 진일보 시켜야하는 법 분야로 여겨집니다.

스포츠 산업의 진흥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의 공적자원이 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공무원 내부 제보자의 보호 역시 필수적 입니다. 미 대법원은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391 U.S. 563 (1968) 을 통하여 공익의 측면을 고려한 공무원 내부 제보자의 수정헌법 1 조 및 14 조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정부의 운영에 관련된 비리 제보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고 적극적인 포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Lance Armstrong 의 약물 사용에 관련한 팀동료 Landis 의 내부 제보자 소송). 스포츠 및 학교체육의 특성상 내부 제보자의 보호 없이는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법원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정비가 다소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보여집니다.

맺음말

탈 엘리트 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스포츠 및 체육 정책은 다수의 제도 정비와 교육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공적자원 투입을 통한 스포츠 산업의 부흥과 학교체육의 개혁은 정부의 엄격한 감시기능이 필수적입니다. 공익/내부 제보자의 법적 보호 및 적극적인 포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